

# 건설 소식

CONSTRUCTION NEWS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건설 업종 판매 개시

건설업계 '외담대 피해' 줄어들 전망

앞으로 건설기업도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전자어음)로 인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건설기업 대상의 매출채권보험 판매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원도급사가 부도를 맞을 경우 하도급사와 2차 협력사, 일용근로자들이 상환해야 하는 피해를 막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법령상 매출채권 보험가입 대상이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으로 한정됐고 건설업은 그 동안 배제됐

다. 최근 원도급 건설사들의 잇따른 법정관리, 워크아웃 사태로 인해 외담대 피해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을 포함했고 이번에 처음 판매를 시작했다.

중기청의 제도운영 계획을 보면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보험요율은 구매자의 신용도와 결제기간에 따라 0.1~5%로 차등화했다.

보상한도는 여러 원도급자와의 계약관계를 포괄해서 보호하는 근보험이 30억원이고 단일 원도급사와의 계약관계만 보전하는 개별보험이 10억원이다. 원도급사가 당좌부도, 폐업, 해산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만기 미결제 후 5일이 경과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올해 건설기업 대상의 보험상품은 중기청이 연초 확보한 1,100억원의 다른 업종 대상 운용예산 중 일부를 떼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내년부터 확대 운용하며 건설업체로서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부도위험이 있는 원도급사의 일부 하도급공사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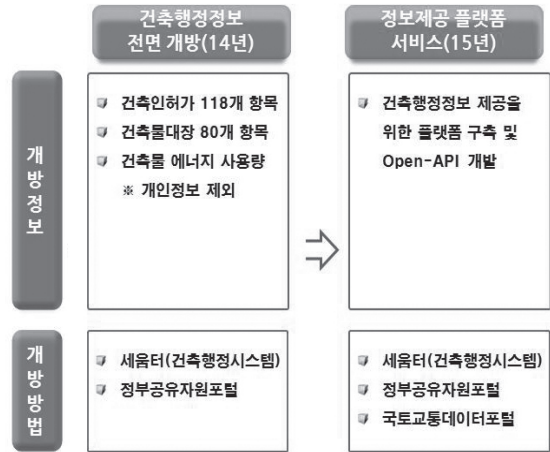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 활용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 가능

앞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하였고, 지난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행정정보 단계별 개방 로드맵  
[세움터(<http://www.eais.go.kr>)]를 통해 제공

**에너지 자급자족 마을, 서울에 선다**

국내 처음... 2016년까지 122가구 태양광 발전에  
통합연료 보일러, 신혼부부 및 1인 가구 우선 입주

정부가 원자력발전 비중 감축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전기료가 현재보다 훨씬 오를 전망이다. 이를 대비해 서울시와 노원구가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를 건설한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집이다. 김성한 노원구청장은 “노원구 하계동 부지(1만7,200㎡)에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를 2016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원구청은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위해 서울시·명지대와 손잡았다. 총 44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노원구는 부지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 개발은 명지대가 맡는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건축비 202억원을 부담하고 정부와 업체로부터 연구비 240억원을 지원받는다. 공동주택 3개 동(106가구), 단독주택 2개 동(2가구), 3층 연립주택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조감도

1개 동(9가구), 땅콩주택 2개 동(4가구), 모형주택 1개 동 등 총 122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다. 영국 런던의 베드제드(Bedzed), 독일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선진국엔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가 이미 건설됐지만 국내에선 최초다.

제로에너지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열이다. 집 전체를 '보온병'처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벽면부터 일반 주택과 다르게 시공한다. 제로에너지 주택의 외벽 두께는 50cm로 일반 주택(30cm)보다 1.5 배나 두껍다. 내부에 들어가는 단열재 두께만 30cm에 이른다.

창문도 흔히 사용되는 2중 유리창 대신 유리를 세 장 덧댄 3중 유리창이 사용된다. 유리 사이엔 열전도율이 낮은 아르곤가스를 채운다. 창틀이나 벽 틈 사이로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기밀테이프를 발라 밀봉한다. 집주인이 창문을 열지 않는 한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다. 집안 환기는 폐열 회수환기 장치가 맡는다. 이 같은 기술로 겨울철 난방 에너지의 90%가 절감된다.

집 안은 태양열을 이용해 덥힌다. 모든 주택은 남향으로 설계한다. 지붕은 물론 벽면까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 공동주택의 동

간 간격을 건축법보다 1.2배 넓혀 층수와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이외에도 지열을 사용하는 보일러와 펠릿보일러도 들어간다. 펠릿보일러는 나무 잔가지와 폐목재를 톱밥으로 만들어 연료로 사용한다.

서울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가 건물에서 나온다. 유럽에선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 주택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선 2009년부터 모든 건물을 제로에너지 주택 형태로 설계해야만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 명지대 이명주(건축학과) 교수는 "경제발전을 고려했을

때 산업체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주택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59㎡(18평)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 1년간 낸 전기·가스비는 78만 7,000원이었다. 이 중 TV 등 가전제품 몫으로 부과된 금액은 15만7,000원이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전기제품을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면 된다. 한 달에 1만3,000원 정도다. 2016년 완공될 예정인 주택 단지에는 신혼부부·대학생·1~2인 가구 등 도시 근로자들이 우선 입주할 예정이다. ☉

